

☞ 2005년 수능 과목, 학생이
선택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28일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5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은 현재처럼 고교 3학년말에 한번 보되, 수험생 각자의 진로에 따라 수능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실업고생의 대학진학 기회를 늘리기 위해 '직업탐구 영역'이 신설되며, 성적은 표준점수로 제공되고, 총점등급이 폐지되는 대신 영역·선택과목별 등급이 공개된다. 2005학년도 수능의 구체적인 문항 유형과 문항 수, 문항당 배점 등 세부 사항은 2003년 중 확정할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2005학년도 수능은 언어와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등 5개 영역으로 치러지는 큰 틀은 현행처럼 유지되나 실업계 고교생들이 응시할 수 있는 직업탐구 영역이 신설되며, 제 2외국어 영역은 기존 6개 과목에 아랍어와 한문이 추가돼 8개로 늘어난다. 현 체제와 가장 다른 점은 현재는 5개 영역을 모두 응시토록 하고 제 2외국어 영역만 선택이지만, 개편안에서는 모든 영역이 선택영역이 돼 학생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일부 영역만 응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수험생이 어떤 영역을 응시하느냐는 가 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학부)가 어떤 영역 성적을 요구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대학들은 2002년 말까지는 2005학년도 학과별 반영영역과 영역별 가중치 등을 확정, 발표해야 된다.

☞ 사립대 8곳 임시 이사진

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임시 이사가 파견돼 있는 11개 4년제 대학법인 중 2001년 12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8개 법인의 임시 이사진을 2002년 1월 1일자로 개편했다.

신임 이사는 다음과 같다.

▲한국외대 △지명관(한림대 석좌교수·KBS 이사장) △김종인(전 청와대 경제수석, 한국외대 총동문회장) △김 근(연합뉴스사장) △장하진(충남대 교수,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박제승(서울지방 변호사회 회장) ▲한성대 △김삼웅(대한매일 주필) △장희익(서울대 물리학과교수) △박은정(전 교원징계제심위원, 이화여대 교수) △서동구(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한국언론재단 부이사장) △윤지희(참교육학부 모회장) △손봉호(전 한국외대 교수, 서울대 교수) ▲조선대 △

노진영(북포대 총장) △최창진(전 전북대 교수, 전원광대 교수·교무처장) △조상채(동창회 서울지역회장, 한국도심공항터미널 사장) △심제민(전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광주광역시 부시장) ▲대구대 △윤덕홍(대구대 총장) ▲상지대 △이돈명(전 조선대총장, 변호사) △유재천(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한림대 부총장) △김동철(전 이화여대 교수) △박영근(중앙대 교수, 교수신문 주간) △지은희(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안병욱(가톨릭대 교수) ▲영남대 △지홍원(전 대구고법, 변호사) △백락청(시민의 방송 대표, 서울대 교수) △최영환(전 과거치 차관, 세종대 부총장) △노희찬(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단국대 △장종현(전 천안대 총장) △김주원(민변 변호사) △신찬균(세계일보 주필) △전풍자(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장) △강신주(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 △이강연(전 관세청차장) ▲서원대 △김용준(고려대 명예교수) △이영수(경기대 교수, 교수신문 발행인) △안병근(전 청주지검 검사, 변호사) △정연주(한겨레신문 논설주간) △박강수(제2건국위 공동위원장, 배재대 총장) △유의재(충북 행정부지사) △유선규(충북

부교육감) △장세현(YTN 이사, 세명장학회 이사장)

☪ 교사 부전공 자격학점

상향 조정

교육인적자원부는 부전공 자격 연수를 통해 21학점 이상을 따도록 하고 있는 이수학점 기준을 30학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2001년 12월 말 국무회의를 통과해 2002년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교원자격검정령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해 이전에 부전공 연수를 받고 있는 교사들에 한해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해 21학점만 이수하면 부전공 교사 자격을 주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차 교육과정이 올해는 고교 1학년에도 적용되는 등 부전공 교사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수학점 상향 조정과 함께 연수의 관리와 평가도 강화, 연수를 받기만 하면 학점을 주던 관행에서 탈피해 과목별 60점 이하는 과락으로 탈락시키는 등 질관리도 함께 할 방침이다.

☪ 실업자·미취업자 IT교육에 100억 원 지원

정보통신부는 1인당 정보기술(IT) 교육비를 최대 300만 원까

지 지원해 주는 2002년 상반기 IT교육 지원계획을 확정, 1/4분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교육 프로그램에는 총 100억 원이 지원되며 미취업자나 실업자, 졸업예정자(재학생도 포함)들이 전문 IT교육기관에서 일반 IT과정이거나 국제공인자격과정(IRC)을 밟을 경우 교육비의 50% 이내(300만 원 한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정통부는 신청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전임강사 수준 ▲최근 교육실적 ▲앞으로 교육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 공대 여학생 장학금 우선 지급 및 해외연수 기회도 확대

교육인적자원부가 1월 3일 과학기술부 및 여성부 등의 정부 부처와 함께 공대 학부와 대학원에 진학하는 우수 여학생에게는 장학금과 해외유학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는 내용의 '국가 핵심전략 분야 고급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우수 여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해외유학 또는 해외연수 기회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미 우수 여학생 장학금 지급을 위해 9,000

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며, 과기부는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 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 대학생 학자금 융자 2배 늘려

교육인적자원부는 1월 4일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위한 2002학년도 학자금 융자 규모를 지난해 4,842억 원보다 95% 늘어난 9,442억 원으로 늘리고 수혜 대상도 22만 1,000명에서 41만 명으로 86%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말 올해 30만 명에게 6,600억 원을 융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경기악화 등에 따른 학자금 융자 수요 증가를 감안, 융자 규모를 더 늘렸다. 융자 대상자는 대학생, 전문대생, 대학원생 이외에 사이버 대학생도 포함된다. 1인당 융자액은 매학기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입학금) 범위(1인당 평균 220만 원 정도)이며, 상환 조건은 단기가 융자후 2년간 분할상환, 장기가 졸업후 7년간 분할상환이며 군입대나 미취업 때는 2~3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율은 지난해 연 10.5%에서 1% 포인트 인하된 연 9.5%로, 이 가운데 학생은 5.25%(지난해 5.75%)만 부담하고 나머지 4.25%는 정부가 국교에서 부담한다.

㉠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2003년 도입

교육인적자원부는 1월 8일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확정, 1월 14, 15일에 전국 의·치대 학장회의와 대학 교무처장회의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국내 41개 의대와 11개 치대는 2003학년도부터 대학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2년 과정의 치·의예과를 유지하거나 폐지한 채 4년 과정의 전문대학원을 운영할 수 있다. 현행처럼 치·의예과(2년)에 들어간 뒤 본과(4년) 과정을 이수하여 의사가 되는 방식도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은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의학박사(Ph.D)와 진료를 전공으로 하는 의무석·박사(D.M.Sc)로 각각 나눠 배출토록 했다. 전문대학원의 정원은 현재 치·의예과 입학 정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 국립대 외국인 교수

올해 100명 선발

교육인적자원부는 1월 8일 시간강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 동안 매년 1,000명씩 증원하기로 한 전임교원 가운데 올해 증원분 1,000명의 10%에 해당하는 100명은 외국인 교수로 채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초빙 분야도 외국어는 제외되고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등 첨단 분야에 집중할 예정인데, 서울대 등에 많은 인원이 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교수의 연봉은 연구실적과 능력에 따라 5만~10만 달러 수준이며, 공무원 월급 외에 차액은 수당 형식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학의 예산에서 보충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인 교수들이 9월부터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9~12월까지의 인건비 보조예산으로 21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인 교수가 채용되면 계속 국립대 교수 정원으로 인정하고 내년에는 외국인 교수 인건비 지원예산으로 8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 전문대 교수자격기준 강화

정부는 1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정례국무회의를 열어 전문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3월 1일부터 전문대 교수 요원으로 임용되려면 4년제 대학 교수 요원과 마찬가지로 ▲교수 10년 ▲부교수 7년 ▲조교수 4년 ▲전임강사 3년 등의 교육 및 연구경력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전문대학 교수 채용시 산업체 근무경력의 70~100%를 연구 경력(중전 50~100%)으로 환산, 인정해 주도록 했다.

㉣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도입

이르면 올 하반기 신규임용부터 국·공립대에 여성교수 채용목표제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국·공립대의 여성교수 비율이 전체 교수 비율의 20%까지 확대되며 사립대도 이러한 수준으로 여교수 비율을 늘리도록 권장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해 한국여성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여성교수 실태 조사 보고서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보고서 결과를

인용, 지난해 현재 전체 4년제 대학의 여학생 비율이 36.3%에 달하고 여성 박사 비율이 국내 박사는 23.8%, 해외 박사는 22.9%에 이르는 데도 여교수 비율은 14.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립대는 여교수 비율이 16.1%인데 비해 국·공립대는 8.8%에 불과, 우선 국·공립대부터 채용목표제를 도입해 장기적으로 전체 교수의 20% 수준까지 여교수 비율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공무원법에 '여성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학문분야에 한시적으로 여성 참여를 촉진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여교수 채용 비율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아 이르면 하반기부터 법령 개정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는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교수 재임용 기준'

공개 의무화

올해부터 대학이 교수를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시키지 못하도록 업적평가 등 재임용 심사 기준을 의무적으로 정해 공개해야 한다. 또 재임용 기준에 미달될 경우 반드시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임용기간 중

료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이 밖에 올해부터 신규로 채용되는 교수라 할지라도 교수나 부교수에 대해서는 정년까지 임용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김응권 대학행정지원과장은 1월 11일 이화여대 강당에서 전국 374개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교무과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약·연봉제 도입을 규정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계약임용제는 종전의 교수는 적용되지 않으며, 신규 채용 교수의 경우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수에 대해서는 계약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신규 채용 교수도 계약에 따라 기간을 3년, 5년, 10년 혹은 그 이상도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때론 관련 규정 해설 게재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에 개정(2001.12.31 공포)된 교육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에 따라 지난 1월 11일(일) 이화여대에서 각 대학의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제적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 지침'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령에 대한 대학

관계자들의 문의가 쇄도하여 이 설명회의 회의 자료 및 질의·응답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www.moe.go.kr) 세소식 메뉴 960번에 게재하였다.

㉢ 대학 기업연구소 허용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월 16일 오후 교원정계제심위원회 대강당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연구 의뢰로 만든 '산·학·연·정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월 중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이번 방안을 상정해 확정하고 상반기 중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방안에 따르면 대학은 내년부터 산학연 협력 사업을 전담할 '산학협력단'을 대학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을 설치하면 대학과 산업체가 동등한 법인으로서 정식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사업 수익도 별도 회계로 처리해 학교 발전에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4억 2,794만 5,736㎡(약 1억 3,000만 평)에 달하는 대학소유 부지내에 산업체 연구소나 연구 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이나 사립학교법이 개정돼 산학연협력단지(테크노파크) 등도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게 된

다. 기업체가 대학부지에 자체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면 상업화가 가능한 연구 프로젝트를 기업이 주도권을 잡고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이나 실험실, 토지 등을 활용해 기업체를 세울 수 있도록 학교기업(School enterprise) 창업도 지원한다. 학교가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분 참여를 통해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도 있다. 아울러 개정 특허법·기술이전촉진법의 오는 6월 시행에 맞춰 대학이 특허권을 취득, 관리하게 되면 연구자 개인도 성과를 배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대학교수의 민간기업 고용휴직제 ▲공학교육인증제, 정보통신(IT)교육인증제 등 산업교육인증제 확대 ▲산학연 협력연구 전담교수제 운영도 추진된다.

☪ 대입 고교등급제 전면 금지

교육인적자원부는 1월 16일 강남 부동산 가격 폭등 억제 대책을 마련, 관련 부처 차관회의를 거쳐 정부 종합대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우선 각 대학의 고교등급제 도입 움직임 및 수시모집 확대, 전형방법 다양화에 따른 불안 심리가 학생들의 강남 유입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고교등급제 시행을

금지하는 고시를 내릴 계획이다. 또한 2월 말까지 대학별로 2003년 입시안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 대학 입시정보 안내센터를 구축해 정보 부족에 따른 학생 이동 및 입시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와 함께 강남 이외 지역에 특수목적고, 자율학교, 대안학교, 각종 특성화 고교 등의 설립을 적극 권장·지원해 평준화가 해제된 수도권 신도시 학생이나 지방 학생들의 서울 강남 유입을 억제하기로 했다. 서울 각 교육청 및 학교에 지급되는 교부금을 강남 이외의 지역에 우선 배분해, 강남과 강북 간 교육 여건 격차 및 불균등 상황을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 수도권 대학원대학 설립·증원 규제

건설교통부는 1월 16일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대학원 과정만 있는 이른바 '대학원대학'의 설립과 증원을 규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대학원대학을 자연보전권역에 신규 설립할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수도권 전체 정원은 300명 범위 내에서

증원토록 제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에 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회를 거쳐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학원대학은 특정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학부과정 없이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으로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대학교,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등 18개교가 있으며 이 중 15개교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건교부는 또 수도권내 산업대, 전문대의 증원허용 범위를 현행 전년도 전국 증가분의 20%에서 10%로 제한, 수도권 집중도를 낮췄다.

☪ 24개 국립대 교수 606명 채용

전국 24개 일반 국립대(산업대·교육대·전문대 제외)가 3월에 역대 최대 규모인 606명의 교수를 신규 채용한다. 3월 이후에도 정보통신(IT)·생명공학(BT) 등 국가전략분야의 교수 300명과 외국인 교수 100명을 뽑을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월 17일에 3월로 예정된 국립대 교수 채용계획을 확정, 대학별로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4만4,000여

3월 국립대학 교수 채용계획

대학명	채용계획 인원	대학명	채용계획 인원
서울대	74	부경대	41
부산대	65	강릉대	21
강원대	30	군산대	13
충북대	20	순천대	11
충남대	36	안동대	14
진북대	39	창원대	23
전남대	53	한국해대	19
경북대	23	한국체대	8
경상대	20	여수대	12
제주대	46	금오공대	13
교원대	6	목포해대	7
목포대	12	계	606

※ 공주대는 9월 모집

명에 이르는 4년제 대학 시간강사들이 교수로 채용될 기회가 커졌다. 3월의 채용 규모는 정년 퇴직에 따른 충원 200여 명을 포함, 지난해 발표된 '7·20 교육여건 개선안'에 따라 확보한 1,000명 중 국가전략 분야를 뺀 일반 분야에 배정된 인원이다.

☞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 의무화

교육인적자원부는 1월 18일 2002학년도 수시모집 실시과정에서 지적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3학년도 수시모집 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2003학년도 입시부터는 수시 1학기나 2학기에 지원해 합격한 경우 등록이 의무화돼 여러 대학에 중복

지원해 합격하고도 수능성적에 따라 등록을 포기하고 정시모집에 지원하는 '보협성' 수시모집 지원이 불가능해진다. 교교교사나 학교장이 작성하는 추천서도 교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 1인당 몇 장 이내만 받을 수 있게 되고 대학들도 양식을 간소화한다. 금년도 수시 1학기 모집은 원서 접수가 6월 3일~15일, 대학별 전형이 1학기 기말고사 이후인 7월 15일~8월 20일로 조정돼 고교 교사의 추천서 작성부담과 수업과행의 문제점이 줄어든다. 수시 2학기 모집의 대학별 전형은 수능 성적발표일인 12월 2일 이전에 원칙적으로 끝나 지난해 일부 대학(14개)처럼 수능성적 발표일 후에 수능

접수만으로 합격자를 가리는 것이 금지되지만, 수능 영역별 등급이나 총점 등급으로 최종 자격 미달자를 걸러내는 것은 계속 허용된다.

☞ 대입 편법 지필고사 제재

교육인적자원부는 1월 20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을 통해 논술을 제외한 대학별 지필고사를 금지했는데도 올해 첫 위반 사례가 나타났고 일부 대학에서는 내년엔 신설할 움직임도 보여 이를 위반하면 행·재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 수정 고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2003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대학별 본고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위반시 제재가 엄격해진다. 이에 따라 면접고사나 적성검사 등의 이름으로 대학들이 실시해 온 본고사성 지필고사가 주춤할 전망이다. 서울대가 검토하고 있는 특기적성 테스트 등도 도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현 기본계획에는 지필고사 금지 원칙만 밝히고 위반시 조치하겠다는 조항은 넣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지필고사를 볼 경우 시정 요구하고 대학 제정지원평가 등에 반영해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고 설명했다.

☉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4곳 지정

교육인적자원부는 1월 21일 이화여대 평생교육원, 천안외대 평생교육원, 대구대 사회교육원, 전북대 평생교육원 등 4곳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학에서 평생교육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평생교육시설 종사자들은 이 곳에서 일정기간 교육 후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2년간 시범운영한 뒤 일반인에게도 개방될 예정이다.

☉ 기초학문 석·박사급

4,000명에 연구비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1월 22일 올해 학술연구조성사업에 지난해 보다 1,000억 원 늘어난 2,300억 원을 투입하고, 이 중 기초학문 육성사업비로 1,212억 원을 책정해 석·박사급 연구인력 4,000여 명에게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초학문 육성사업비는 지난해 190억 원에 그쳤으나 올해 1,022억 원 증액됐으며, 2003, 2004년에도 각각 1,000억 원씩 투입돼 고사 위기의 기초학문 육성을 위해 쓰여진다. 기초학문 육성사업비가 2,360개 연구과제에 지원되면 ▲책임·선임연구원 등 박사

1,600명 ▲박사과정생 950명 ▲석사과정생 1,300명 ▲전문연구인력 150명 등 4,000명이 연구비를 보조받게 된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기초학문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 연구업적과 연구계획이 우수한 연구자 150명을 대학과 연구소에서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문연구인력'으로 지정, 1인당 연간 3,000만원씩 1~3년간 지원하는데 5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 학교도서관 활성화 대책 추진

교육인적자원부는 1월 25일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지식기반 사회의 핵심 인프라인 학교도서관 활성화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으고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기획예산처 등 6개 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합동 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도서관 수와 장서 수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공동도서관의 경우 국내 도서관 수는 2000년 현재 420개, 장서 수는 2,516만 4,000권, 1인당 장서 수는 0.52권에 불과한데 비해 미국은 '96년 기준 1만 426개, 장서 수는 7억 1,101만 3,000권, 1인당 장서 수는 2.59권이다. 대학도서관의 1인당 장

서 수는 하버드대가 474권, 버클리대가 240권, 미시간대가 151권이나 서울대는 62권에 그치고 있으며, 장서 수도 하버드 1,443만 7,000권, 버클리가 910만 8,000권인데 비해 서울대는 211만 권에 불과, 미국 대학 순위 60위권 밖이다.

☉ 대학 기술인력 리콜제 첫 도입

산업자원부는 1월 28일 청와대에서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R&D 전략회의'에서 대학이 졸업생을 기업 수요에 맞춰 무상으로 재교육하는 기술인력 AS제(리콜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기술정책 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장재식 산자부 장관은 "향후 기술정책의 중점을 일등상품 및 일류 기술 개발과 표준·산업디자인 등 기술인프라 확충, 산·학·연 협력, 국제기술협력 강화 등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우선 기술인력의 현장 맞춤형 교육과 공학교육인증사업을 확대하고, 올해 산업기술대학을 졸업해 취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기술인력 AS제를 시범 실시한 뒤 점차 다른 대학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 전문대졸업자

4년제 정원 외 편입 허용

교육인적자원부는 2월 6일 2003학년도 전문대 진학자 중 7,000여 명은 졸업 후 지방 4년제 대학의 관련학과 3학년에 정원 외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또 4년제대와 전문대 졸업자가 전문대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등록제나 산업체 위탁생 특별전형도 늘어난다는 내용의 2003학년도 전문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2003학년도에는 '대학정원 외 편입학 제도'가 신설돼 전문대에 다니면서 4년제대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하면 4년제대 3학년 입학정원의 3%(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까지 정원 외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수도권 소재 4년제대는 편입 대상에서 제외되나 산업대는 지역구별 없이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와 함께 정원 외 특별전형 가운데 대학과 전문대 졸업자를 뽑는 전형의 인원 제한을 풀어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 국책연구기관

대학원 설립 추진

산업자원부는 2월 6일 국책 연

구기관들이 보유한 실험·실습 기자재와 시설, 중견 연구원들을 공동 활용해 석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지식정보대학원(가칭) 설립안'을 확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이 계획에는 생산기술 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전자부품연구원과 요업기술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산업기술대학이 동참하기로 했다. 국책 연구기관이 교육을 병행하는 것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한국과학기술대학(KAIST)이 있으나 지식정보대학원은 별도의 캠퍼스를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새로운 실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산자부 고위관계자는 "국책연구기관들이 수행하는 실용 프로젝트에 견습 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기존의 대학(원)이 취약한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이 가능하다."며 "이 같은 자극이 일반 대학의 소프트웨어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대졸자 취업실태 공표 추진

대통령 지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배무기, 이하 인자위)는 2월 6일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교육·노동시장 이행 지원체제 구축 및 도서관 정보인프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인자위는 최근의 청년 실업이 대학의 인력양성체계가 산업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졸업자에 대해 전공·계열별 취업 실태를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의 교육 만족도를 조사하고 재학생 대상 기업연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서관 정보인프라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을 멀티미디어형 교육정보센터로 개편하고 전국 대학도서관을 가칭 '대학도서관 협력망'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공공도서관 기능을 강화해 멀티미디어 자료,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국내대 해외유학박람회 확대

교육인적자원부는 2월 10일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대학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는 해외 11개 지역에서 해외유학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올해 참가 지역은 ▲시안(西安) 충칭(重慶) 칭타오(靑島) 창춘(長春)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 중국 6개 지역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말레이시아 콰라룸푸르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일본

도쿄 등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는 특히 중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중국 지역 참가 지역을 2곳 늘렸고, 자카르타, 팔라렘푸르, 하노이, 호치민 등 4개 지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현지에서 해외유학박람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국립대 자체 수입 활용 가능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마련한 '국립대 수입금 처리제도 개선지침'을 통해 3월부터 국립대는 자구노력에 의해 확보한 수입의 30%를 국고로 내면 나머지 70%는 기성회비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2월 13일 밝혔다. 또 실험실습 시설·기기 등에 대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재투자해 얻는 수입은 대학이 100% 전액을 기성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국립대가 공개강좌나 시설 재투자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도 전액 국고로 들어갔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국립대의 자구노력 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것으로 국립대의 정부재정 의존도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2003년 이후에는 학교회계 제도 도입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 계획 점수 결과 발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학년도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 계획을 접수한 결과, 의대 가운데 가천의대(정원 40명), 건국대 충주캠퍼스 의대(정원 40명) 등 2개 대학이 전면 전환 계획을 밝혔고 경희대(정원 120명)가 기존 의대 체제와 전문대학원 체제 병행계획을 알렸다고 2월 14일 발표했다. 경희대는 의대와 전문대학원 정원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전문대학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권고한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따라 의예과 선발 정원을 60명 이하로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03학년도 입시에서는 41개 의대의 의예과 선발 정원이 2002학년도 3,253명보다 140명 정도(4.3%) 줄어든다. 치대는 11개 치대 중 5개교가 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함에 따라 예과 선발 정원이 2002학년도 757명보다 45.8%(347명) 줄어든 410명이 된다. 2003학년도 전문대학원 전환 대학은 2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05학년도에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문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학년도나 2005학년도에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대학은 4월 20

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 계획을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 업무 보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월 15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다음은 이날 보고된 교육인적자원부 2002년 업무계획 주요 내용이다.

▲ 고교 평준화 보완 : 내년에 수도권과 일부 지역 시도교육감의 건의를 받아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학교를 추가로 확대한다. 시행계획은 올 상반기 중 확정한다. 특성화고(41교), 예·체능고(35교) 및 전국 농어촌고(666교) 등에 대한 자율학교운영을 확대하며 특수목적고와 직업학교, 대안학교 설립·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 수능 출제체제 개선 : 수능 출제에 현직교사 참여 인원을 2002학년도 10명에서 2003학년도에는 32명으로 늘린다. 문항의 타당성과 난이도를 사전 검증하기 위해 교수·교사로 구성된 계약제 제택 출제위원 290명을 위촉하고, 교사 9명을 수능기간 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파견하며 수능 출제에 참여하는 교사에게는 대체 강사료를 지급한다. 수능 모의평가를 실시해 난이도 적

중률을 높이고 수능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가제점 결과를 발표해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한다. 또 수능 출제를 위한 상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교과목별, 영역별 문항 분석을 위한 전문인력을 보강한다.

▲ 국립대 운영 자율성·책무성 강화 : 대학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성회계와 국가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일반회계를 통합하는 학교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대 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 국립대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인다. 국립대 학교회계에 대해서는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직원·동창회 및 지역 인사로 구성된 재정위원회를 둔다. 2월 중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원,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이 참여하는 국립대 발전기획단을 구성하고 3월 중 관계부처 협의와 대학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 교육 여건 개선사업 : 올해 고교 학급당 학생 수 35명 감축을 위해 755개교에서 공사가 진행중으로 2월 말까지 53%(408개교)가 완공되나, 우선 7차교육과정이 적용되는 1학년에 대한 학급편성은 완료한다. 4월까지

84%(650개교)가 공사를 완료하고 5월말까지는 교실 증축을 끝낸다. 2004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264개교를 비롯해 1,202개교를 신설한다.

▲ 졸업자 취업 통계 구축 : 올해 3억 원을 투입해 교사, 전문직, 공무원, 박사인력, 해외전문인력 등 전문인력 DB를 구축한다. 또 5억 원을 투자해 고교 졸업생 25만 명, 대학생 45만 명에 대한 취업 통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2004년부터는 졸업자의 취업 실태를 공표한다. 내년에는 16억 원을 투자해 평생교육 DB 등 기타 인적자원 DB와 학생 수, 교원 수, 학교 수, 학급 수 등의 교육 수요를 10년 단위로 예측하는 체제도 구축한다.

▲ 우수 외국대학원 유치 : 세계적인 외국대학원을 시범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또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 국가전략분야를 중심으로 복수학위·공동학위 과정을 운영할 때 연구비와 교수초빙 비용을 지원한다. 외국대학원 유치 추진 기본계획은 2월 중 완성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 올 9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 기초학문 육성·자격관리 체제 개편 : 기초학문분야에 올해 1,212억 원을 투자하며 박사급 연구원 및 시간강사나 대학원생 이외에 학부 3~4학년생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토록 한다. 교육·훈련과 자격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자격기본법을 개정한다. 법에는 직무능력 표준을 제정하고 자격과 자격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국가자격체제를 구축하며 전문대나 대학에서 자격취득자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다.

▲ 이공계 진출 촉진 대책 : 교차지원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학 자율 사항이나 각 대학별로 허용 범위를 제한해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이공계 학생 병역특례는 현재 운영중인 전문연구요원 병역 특례지원자가 2001년의 경우 배정 인원인 3천 명에 약 500명이 미달되는 2천520명임을 감안, 남은 500명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배정 인원 확대를 검토한다.

● 경기 지역에 교대 설립 추진

교육인적자원부는 2월 18일 "광역 지자체에서 필요한 교사는 자체 양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인천교대 경기분교 형식으로 경기도 내에 교대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월중 교대·교육청·교원단체·학부모 대표 11명으로 구성되는 초등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서 경기도 내 교대 신설과 관련된 제반 여건과 문제점 등을 검토한 뒤 기획예산처·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분교가 세워질 후보지로는 경기도가 부지 제공 의사를 밝힌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옛 석산부지(9만3천 평)가 유력하다. 경기도는 이곳에 연건평 1만400평 규모의 분교를 짓고 입학정원을 500(전체 학생 수 2,000명)으로 하는 방안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이미 제시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분교 설립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면 2004학년도에는 개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립대 기성회비 부담 집행 적발

감사원은 2001년에 48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교육분야 감사를 벌여 서울대 등 전국 국립대학들이 교육 여건 개선 명목으

로 등록금에 포함시켜 징수해 온 기성회비 가운데 3분의 1 가량을 교직원 수당으로 부당 집행해 온 사실을 밝혀내고, 국립대학 기성회 회계를 일반회계와 통합, 2003학년도부터 기성회비를 없애도록 했다고 2월 18일 밝혔다. 감사 결과, 국립대학들은 2000년도 기성회 회계 집행 총액 7,307억 원 가운데 2,332억 원(32%)을 교직원에게 학사지도비 등 명목 수당으로 지급했고, 289억 원(4%)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학 교직원은 같은 공무원인 교육인적자원부 직원에 비해 1인당 매달 50만~100만원의 수당을 더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은 또 입시 전형료 등으로 수입금이 생길 경우 각종 수당을 신설하거나, 기존 수당의 단가를 올리는 방법으로 담당 직원, 교무처장, 총장 등에 분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대학은 석·박사과정 이수 중인 자에게 취·할 BK 보조금 2억4,600만 원을 조기 취업자 등 113명에게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내 법인·기업연구시설 설립 가능

교육인적자원부는 2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국·공·사립대에 산업체와의 계약체결이나 연구진행 관리를 전담하는 산학협력단이 설치되고 대학 부지내에 산업체 연구시설이 들어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비, 컴퓨터 관련 기업, 제빵회사, 디자인 용역회사 등 학교기업을 대학이 운영할 수 있고 학교내에서 현장실습도 가능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 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종합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산학협력단은 대학이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대학을 대표하는 법인격을 갖게 되며 자율적으로 회계관리를 할 수 있게 돼 국립대의 경우 산학협력을 통한 수입을 자체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책에는 대학교수의 민간기업 고용휴직제, 산업교육인증제 확대, 산학협력연구 전담교수제 운영 등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